

# 주유소, 폐업통계 오류로 “시끌”

## 주유소협회, 기존 집계치 절반으로 수정 ... 공제조합 설립 유도 의혹

전국 1만3000여개 주유소를 대표하는 대한주유소협회의 폐업 주유소 수가 실제보다 과장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시장에 따르면, 주유소협회는 매달 공개하는 월별 전국 주유소 현황자료를 통해 폐업 주유소 수(누적)를 2013년 1월 98개, 2월 103개, 3월 122개로 집계했다. 집계치는 전체 주유소의 1%에 가까운 비중이다.

폐업 주유소 수는 주유소 시장의 경영난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로 인식돼 시장 안팎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주유소협회가 추진하는 <공제조합 설립>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폐업 주유소 수가 근거가 됐다.

공제조합은 재정난에 처한 한계 주유소에 전·폐업 자금을 지원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떠나도록 하자는 취지로 조성됐으며, 해당내용을 담은 법안이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현재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내부에서 협회 자료의 폐업 주유소 통계가 일부 부풀려졌다는 지적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주유소협회는 5월14일 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폐업 주유소 통계에 대한 전면 수정작업을 벌여 폐업 주유소 수가 2013년 1월 43개, 2월 48개, 3월 67개로 기존 수치에서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충남·전북지부에서 폐업 주유소 통계를 올리면서 2012년 누적치와 연결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단순 실수임을 강조했다.

주유소협회 일부 회원들은 협회가 시장 위기를 과장해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통계에 손을 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주유소 경영주는 “잘못된 수치가 이미 언론에 공개되고 공제조합 설립 법안의 검토보고서에도 인용되는 등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이라며 “정황상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통계 오류 사태가 공제조합 설립을 둘러싼 내부 갈등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유소협회는 전국 모든 주유소가 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업주들은 공제조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율가입 원칙으로 맞서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5/16>